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18.(목) 10:00 < 8.18.(목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8. 18.(목)
담당 부서	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창희 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 황채은 (044-203-4913)

산업부 1차관, 주요국 공급망 위험(리스크) 점검

- 러-우 전쟁 장기화 등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의 국내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민·관 합동 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

□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**제1차관**은 8월 18일(목), **제24차 산업자원안보 TF***를 개최하여 러시아, 중국, 대만 등 **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**하고,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**「소부장특별법」 개정방향**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.

* 산업부 1차관 주재 공급망, 수출통제, 기술보호 등 산업자원안보 관련 이슈 논의('21.2월~)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< 24차 산업자원안보 TF 회의개요 >

◇ **일시/장소 :** '22.8.18(목), 대한상의 대회의실

◇ **주요내용 :**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,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 의견수렴

◇ **참석자 : (산업부)** 장영진 제1차관, 소부장 협력국장 등

(업계) 주요 업종별 협·단체(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10개)

(유관기관) 대한상의, 무역협회(무역硏), 코트라, 산업연,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

○ 금번 회의는 **①미-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, ②러-우 전쟁 장기화, ③중국의 대(對)만 수출입 금지 등** 세계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·공유하고, 구체적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.

○ 특히,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, 대한상의·무역협회 등 경제단체, 코트라·산업연 등 관계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여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**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(러시아), 이차전지 소재(중국),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(대만) 등 총 30여개 핵심품목**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**장 차관**은 "업종별 협·단체와 코트라·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**적극적인 협조를 바탕**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**조기경보시스템(EWS)**을 구축하여 **주요국의 특이동향, 수출입 현황 등**을 차질없이 모니터링중"이라며 **참석기관에 대한 감사**를 표하면서,

○ "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**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**되나, 국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수 없는 바, **수입국 다변화, 비축 확대,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**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"고 강조하였다.

<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예시 >

◇ **(요소)**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 발굴로 특정국 의존도 대폭 축소(97%→56.9%)
◇ **(마그네슘괴)** 정부비축 추경예산 반영(2개월분, 132억원)
◇ **(반도체 희귀가스)** 할당관세 적용(5.5% → 0%) 및 자체생산 기술개발 지원*
* (네온) 기술개발·성능평가 후 국내 수요기업에 납품중, (크립톤·크세논) 산업부 R&D 추진중

□ 아울러, 금번 회의에서는 **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**에 대한 **의견수렴**도 이루어졌다.

※ 이하 참석자 주요 발언은 안건 사전공유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○ **기존**의 「소부장 특별법」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**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**을 맞춰 **산발적·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국제적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**이다.

○ 이에 산업부는 입법부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**민간의 비축, 수입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,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**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○ 회의 참석자들은 **법개정 취지에 공감**하면서, 특히 정부의 **공급망 관련 지원체계 구축**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건의하였다.

○ 한 참석자는 "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**민간 중심의 공급망 위험 관리는 한계**가 있을 수밖에 없다"라고 언급하면서 "**비축, 수입국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서둘러 추진**해주길 희망한다"고 밝혔다.

□ 산업부는 향후에도 **조기경보시스템** 가동을 통해 **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**하고, **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**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,

○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**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